

보도 일시	2023. 3. 22.(수) 12:00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익 (044-205-3961)
		담당자	사무관 박현우 (044-205-3962)

행안부,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-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 지속 추진 -

-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(수),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-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,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('20~'22) 12,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,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.
- 실제 사례를 보면,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'ㄱ공사'의 역 내 유희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- 'ㄴ의료원'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 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하여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.
-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·공단, 지방출자·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*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
- * 지방공공기관 임대사업에 입주해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

-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.
 -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, 약 150개 지방 공공기관에 입주한 12,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·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”라며, “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